



한미 정상 “北 6자복귀 공동 조치”



북핵 입장차 일단 ‘덮고가기’

대북정책 유연성 강조 ‘2+2 회동’ 막후 조율

백악관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당초 대북제재문제 등 난제들을 아예 피해 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한미 양국이 정상 회담 전야인 13일 엿박자를 보 이면서 한미간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.

하지만 정상회담 결과는 당초 예상 대로 큰 입장차 없이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양국이 ‘공동 조치’를 취한다는 성과물을 도출했다. 이에 따라 다시 열릴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 될 것이라는 다소 이른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. 대북 추가 제재설이 나 도는 중 이 같은 합의는 미국이 향후 대북 정책기조에 유연성을 발휘할 여 지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.

◇정상회담 전야 엿박자=정상회 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의 당국자들은 대북 대처방식을 놓고 서로 다른 말 을 했다. 한국 측에서 미국의 크리스 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최근 한중 일 순방 기간 중 북한에 직접 대화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고 공개한 데 대해 미국은 강하게 부인했다.

미 국무부 손 맥코맥 대변인은 13 일 미국이 힐 차관보를 통해 북한에 직접 대화를 제의했다는 한국발 보도 에 대해 “힐 차관보에게 확인했는데 그런 적이 전혀 없었다”며 부인했다.



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새벽(한국시간)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 화하고 있다. /연합뉴스

◇정상회담 조율한 ‘2+2 회동’= 한·미 정상회담 결과는 우려를 피해 갔다. 이에는 양국 고위 외교관인인 ‘2+2 회동’이 진가를 발휘했다는 평 가다. ‘2+2’는 반기문 외교통상부장 관과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 책실장,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으 로, 양국 정상의 손과 발의 역할을 톡 톡히 했다.

이들은 도착 첫날부터 회담직전까

지 수차례 회동하면서 회담의제를 비 롯해 모든 사항을 조율했다. 한·미동 맹이나 북핵해법에 대한 이견이 부각 되고, 자칫 정상회담이 엉뚱한 방향 으로 흘러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4인 이 머리를 맞대 성과물을 도출해냈다.

◇틈새 메우기보다는 덮기에 급급 = 하지만 한미간 입장차를 메우기보다는 덮기에 그쳤다는 평가도 있다. 양국 정 상이 표면적으로 북핵해결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북공조와 한미동맹강화

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제스처만 보여주는데 그쳤기 때문이다.

한국 측은 회담 전 공개적으로 이 번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문제를 논 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. 그 러나 이는 대북제재를 놓고 한미간 입장차이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 한 것이자 입장차이를 좁히려는 노력 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비쳐졌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광주 찾은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

“호남고속철도 조기 개통 경제 논리 적용해선 안돼”

“호남고속철도 조기개통에 경 제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.”

14일 초도 순시 차 광주를 방문 한 이철(李哲)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한국철도공사 광주지사에서 가 진 인터뷰에서 “지금처럼 정부 예 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 서 호남고속철도를 조기 개통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지만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부담해 야 할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는 효 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”고 말했다.

이 사장은 이어 “호남 고속철 뿐 만 아니라 철도에 더 투자를 해 전 국을 바둑판처럼 연결해야 한다” 고 철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

이 사장은 “과거 경부고속철의 경우 정부 부담액이 35%에 불과했 지만, 호남 고속철은 완공될 때까 지 비용의 85%를 정부가 부담하겠 다는 약속을 한 정부 고위 당국자 에게 받았다”면서 “그렇게 된다면 공사 측도 부담금도 줄게 돼 차후 예상되는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그는 철도공사의 적자 원인에



대해서 정부의 잘못된 판단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.

그는 “고속철도 타당성 조사 후 건설계획을 확정할 때인 1989년만 하더라도 경부고속철도 건설비용 이 약 5조8천억원 들 것이라고 예 상했지만 완공까지 18조원이 들었 고, 반면 수입은 예상액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벌어

서 갇아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”면서 “이밖에 공사로 전 환했을 때도 정부가 가지고 있었 던 건설 부채까지 공사 측에 전가 하는 등 정부의 잘못된 예측이 공 사 재정을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 고 있다”고 주장했다.

그는 공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서는 ▲현재 안고 있는 부채(약 6 조)에 대한 이자(약 2천500억) ▲ 정부에 지급하는 선로사용료(연 간 5천500억) ▲ 청소년·노약자 운임 할인 등 공공서비스의무보 상(PSO·Public Service Obligation)금(약 1천억) 등 8~9천억원 에 달하는 공사 측 부담금 가운데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.

이 사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,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2·13·14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. 2005년 열린우리당 교문을 지냈 고, 같은 해 6월 한국철도공사 사 장으로 임명됐다.

/이승배기자 lsb54@kwangju.co.kr
/사진=최현배기자 choi@

“남민전, 간첩단 아닌 자생적 사회주의 조직”

경찰청 과거사위 “6·25 중 민간인 1만7,000명 학살”

군과 경찰이 6·25 전쟁 기간과 그 직후 ‘보도연맹원’ 등 민간인 1만7천 여명 이상을 학살했다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. 또 북한의 지령을 받 은 대규모 간첩단으로 발표했던 남조 선민족해방전선(남민전)은 자생적 사회주의 단체였을 뿐 북한과 실제 연계는 없었다는 점도 재확인됐다.

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(위 원장 이종수 한성대 교수)는 14일 이 런 내용을 담은 ‘보도연맹원 학살의혹사건’, ‘남조선민족해방전선사건’, ‘1946년 대구 10·1 사건’ 중간 조사결 과를 발표했다.

◇보도연맹원 학살의혹사건 = 보 도연맹원 학살의혹 사건이란 6·25 전쟁 중 경찰, 군, 우익단체 등이 ‘국

민보도연맹’에 가입했던 사람들을 집 단학살했다는 의혹 사건을 말한다. 경찰청 과거사위는 경찰 전선에 입력 된 당시 존안자료를 검토해 6·25 당 시 민간인이 최소한 1만7천716명 학 살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.

적법절차 없이 군·경에 의해 처형 된 민간인 중 남로당원으로 지목된 이가 5천413명, 보도연맹원이 3천 593명, 치안대 활동자 1천897명, 인 민위원회 활동자 1천855명, 빨치산 활동자 1천209명, 민청 가입자가 949 명이었다. 부역이나 좌익단체 활동 혐의가 전혀 없었던 사람도 48명이 살해됐다.

그러나 이 같은 피해 규모나 좌익화 동 기록은 남아 있는 경찰 자료에만

의존한 것이어서 실제 희생자 수는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.

◇남민전 사건 = 박정희 전 대통 령 암살 직전인 1979년 10월 처음 발 표된 남민전 사건은 당시 ‘무력에 의 한 적화통일노선’에 따라 반국가활동 을 벌인 대규모의 도시게릴라 단체’ 로 규정됐다.

그러나 경찰청 과거사위는 “기존 대법원 판결대로 남민전이 사회주의 를 지향한 실존 조직이었음은 인정되 지만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것 은 아니다”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.

자생적 사회주의 운동 차원에서 조 직된 일부가 북한과 연계를 시도했으 나 미수에 그쳤고 기소 전 언론에 보 도됐던 것처럼 ‘간첩단 사건’은 아니 었다는 것이다. 실제로 사건 당시 검 찰 기소 내용에도 간첩활동 혐의는 빠져 있었다.

/연합뉴스



정세현 민화협 상임공동의장

정세현 민화협 협력법국민협의 회(민화협) 상임공동의장은 14일 “미국이 관리 가능한 범위내에서 북 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 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”고 말했다.

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의장은 이 날 오전 흥사단 통일포럼의 주제발표 를 통해 북한 핵관련 한미간 대처과 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“미국의 성

동격서(聲東擊西·동쪽에서 소리내고 서쪽에서 적을 친다)를 경계해야 한 다”며 이같이 강조했다.

정 의장은 “북한 핵관련 남북간 로 드맵이라 할 수 있는 지난해 9.19 공 동성명이 성안될 즈음에 미국은 위 패,인권,마약문제 등 북한의 도덕성 문제를 들고 나와 문제가 얽히면서 굉장히 풀기 어렵게 됐다”며 “미국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

생각해 봐야 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그는 또 “우리는 그동안 ‘북핵 불허’ 를 금과옥조로 삼고 핵문제를 다뤘왔 는데 미국 부시 정부의 대북압박 이후 북한은 오히려 핵활동을 재개, 미국이 북한의 핵활동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까지 든다”고 지적했다.

정 의장은 이어 “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 도록 묶고 일본도 관리하기 위해서는

자신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북한 이 몇 개의 핵을 갖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”면서 “북핵 불허’ 가 실현 가능한 본심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그는 “북핵문제에 대해 좀 더 냉철 하게 생각해 남북대화나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/연합뉴스

“美, 관리가능한 북한핵 허용 의심”

北 6자회담 복귀해 美 ‘성동격서’ 차단해야

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!

가스활명수같은 남자!

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-
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-
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?

11가지 생약성분-
부채표 가스활명수^큐

부채표가 없는 것은
활명수가 아닙니다

100년의 사람 - 부채표
동화약품

최속도출 김동원